

제주항공 참사 1년3개월만 무안공항 ‘전면 재수색’

김용수 국조실 2차장, 유가족과 약속 잇단 유해 발견 사과...대처도 발표 빠른 시일 내 착수...내달 완료 목표

정부가 초기 수습 부실 비판이 제기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약 1년3개월 만에 전면 재수색에 나선다.

19일 오후 2시 무안국제공항을 찾은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은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가진 면담을 통해 "유해와 유류품을 재차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달 12일부터 잔해물 재조사 및 잔해 보관 개선 작업에서 다량의 희생자 유해와 막대한 양의 유류품이 잇따라 수습된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김 차장은 유가족들에게 "유해들이 발견되는 상황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현장 외 지역까지 재수색을 이어가겠다. 4월까지 다 될 것으로 전망되나 필요하다면 충분히 더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다 됐다고 할 때까지, 더는 문제없도록 할 것"이라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성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잔해물 재조사가 열린 1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경찰 관계자들과 유가족들이 잔해를 살펴보고 있다.

/서형우 기자

의 있게 수습과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면담을 진행한 이후 유가족과 함께

무안공항 활주로로 이동해 끝단의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을 살펴봤다. 이 과정에서 희생자의 유해 일부로 추정되는 조각 2점이 추가로 발

견됐다.

이 조각들은 이날 오전 잔해물 재조사 작업에서 발견된 1점과 공항 담벼락 외곽에서 수습된 7

점과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인계돼 인골 여부 확인과 DNA 대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김 차장은 재조사와 개선 작업을 마친 유류품의 보관 실태를 확인하고 지난 주말과 휴일 유가족에 의해 유해 추정 조각이 발견된 활주로 외곽 담벼락을 둘러본 후 "이달 말까지는 확실하게 마무리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차장은 그러면서 "이후 유해 발견 가능성이 있는 곳을 비롯해 4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재수색을 실시하겠다"며 "하나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된 경우에 대해서도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재차 약속했다.

끝으로 김 차장은 "혼자서(국무조정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역할을 분담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신속·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겠다. 유가족들의 의견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수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아직 전부 믿을 순 없지만, 계획을 잘 세워서 실행도 잘 해달라"며 "유가족들이 2·3차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한편, 20일에는 대통령비서실 경정통합수석과 국민통합비서관 등이 무안공항을 찾아 유가족협의회와 간담회를 갖는다. /서형우 기자

보조금 횡령 오월단체 인사들 '네 탓' 공방 예고

'허위 채용' 부상자회 서로 혐의 부인 정성국 전 공로자회장 "오점 죄송"

허위 직원을 채용하거나 사지도 않은 차량의 구매 대금을 지급하고 돌려받는 방식으로 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오월 공법단체 인사들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19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공로자회 전 임원 등 8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부상자회에서 황일봉 전 회장과 A 전 복지사업본부장 등이, 공로자회에서는 정성국 전 회장이 주요 피고인으로 분류된다.

황 전 회장은 A씨 등과 공모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수백만원을 청구하고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채용된 이들 중에선 황 전 회장이 광주 남구청장으로 재임했을 당시 알고 지내던 남구원의원의 자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A씨는 공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가족의 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는 등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 전 회장은 A씨와 공모해 반환해야 할 보조금으로 차량을 산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이를 착복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A씨와 황 전 회장은 서로 함께했다는 범행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책임을 넘기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정 회장은 혐의 일체를 인정하며 "단체에 오점을 남겨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고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회장과 사단법인 시절 부상자회 자금 2억원 상당을 횡령한 전 간부에 대해서 각각 징역 1년·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 등 혐의를 인정한 4명에 대해서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나머지 4명의 재판은 다음 달 16일 재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이날 황 전 회장 등에 대한 재판이 열리기 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는 국가보훈부 감사 결과로 드러난 비리 사안에 대해 엄중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안재영 기자

광주 수완지구 빌라서 칼부림...20대 남녀 중태

광주 한 빌라에서 20대 남녀가 흥기에 찢린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한 빌라에서 남녀가

싸우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흥기에 찢린 20대 남녀를 발견했다. 여성은 빌라 복도에, 남성은 세대

내부 거실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관계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재영 기자

광주서 '공무원 사칭' 보이스포싱 기승

북구 동행정복지센터 직원 행사 업체에 사칭 의뢰...명함 전달 소방 사칭 물품 구매 사례 등도

광주에서 공무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포싱이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5분께 용봉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을 사칭한 전화가 관내 한 청소업체 측에 걸려왔다.

해당 인물은 행정복지센터 내부 시설 이전 등을 명목으로 청소업체에 연락해 작업을 의뢰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실제 공무원인 것처럼 부서를 언급하거나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설명하며 신뢰를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7일에도 양산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을 사칭한 유사한 연락이 있었으며, 당시 사칭 인물은 이사업체 측에 '광주 북구 통합행정복지센터'라고 적힌 명함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가 직접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북구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연락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소방기관을 사칭, 속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등 유사 신고도 접수돼 소방 당국은 관련 사안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윤찬용 기자

"돈 갚아라" 채무자 감금 20대 2명 체포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9일간 모텔에 감금한 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인을 모텔에 가두고 공등으로 감금한(공등감금) 혐의로 A(20대)씨 등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 일당은 지난 10일 오전 10시께 20대 피해자 B씨를 서울에서 승용차로 데려와 광주 서구 치평동 일의한 모텔에 9일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B씨가 빌린 5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감금에 가담한 다른 용의자 2명도 쫓고 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연상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